

한미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비교

“정부는 특히 미국 의회와 연구기관 등 한반도 정책 수립에 영향이 큰 여론주도층과 대화 채널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방침입니다.” 지난 4일 미국 대선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마치고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한 말이다. 이 말은 미국의 경우 여론주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해당국가의 대외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여론주도층의 대외인식 정향과 정치적 선호분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필요조건임에 틀림없다.

□ 한미 양국 전문가 여론의 국제인식, 국제주의와 다자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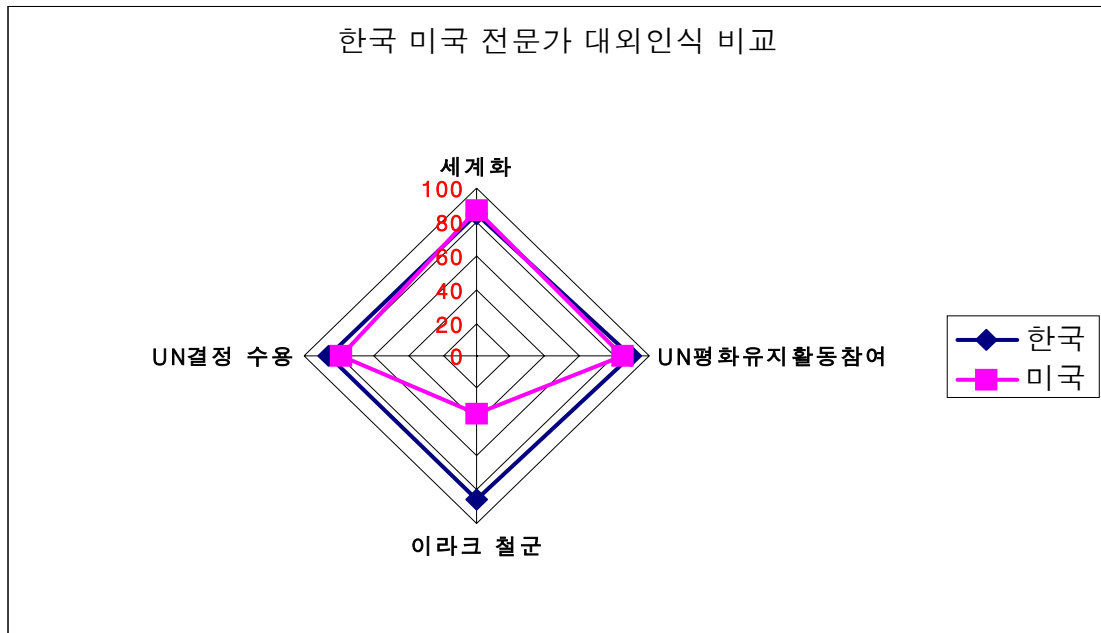
미국은 UN결정 따라야 한국 86%, 미국 76%

정부의 농업보조금 찬성 한국76%, 미국50%

세계의 한편에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이 드세어지면서 세계화에 대한 비판의식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공히 세계화를 시대적 추세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국 전문가들은 자국이 국제 문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세계화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의 84%, 미국 전문가들의 87%가 유익하다는 응답을 했다. UN 국제평화유지군 참여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들의 89%, 미국 전문가들의 84%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을 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나라가 자국을 WTO에 제소하여 한국에 불리한 결정이 나왔다면 따라야 한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역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한국82%, 미국85%)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눈여겨볼 점은 중요한 것은 국제적 개입이 일방적이기 보다는 UN과 같은 다자주의적 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자주의적 접근방식을 선호한다. 미국은 미국의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UN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서도 미국 전문가들은 78%, 한국 전문가들은 86%가 그렇다고 답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가 농민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의 무려 76%가 찬성한 반면, 미국 리더의 찬성은 50%에 그침으로써 상당한 인식격차를 보였다. 양국 전문가들이 국제적 연계 강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주의적 인식 경향을 공유하면서도 한국 전문가들이 농업보조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현재 한국 농촌사회의 붕괴현상에 대한 우려와 함께 농업자체를 일종의 예외상품으로 이해하려는 인식에서는 전문가들 역시 일반적인 사회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관련 그래프



□ 안보에 있어서는 현실주의

미국의 핵사용 절대불가 한국43%, 미국 25%,

한편, 군사력 사용과 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전문가들은 모두 현실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전쟁 개시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서 미국 전문가들의 과반수인 61%가 ‘군사적 공격 개시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면 전쟁개시가 가능하고 ‘선제 공격을 해온 경우’가 25%가 달했다. 즉, 국가이익과 생존을 위해서는 군사력 사용을 하나의 현실적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도 양국 전문가의 과반수가(한국 52%, 미국 57%)가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불가능’이라는 한국 전문가의 43%가 지지를 표명했지만, 미국의 경우 불과 25%만 찬성함으로써 한국 전문가들의 상당수는 핵무기 사용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전문가들 모두 자국의 국제문제에 대한 개입에는 적극적이면서도 개입의 제한범위에 있어서는 상당히 엇갈리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 중동 지역의 대다수 사람들이 미군의 이라크 철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35%만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 전문가들은 86%가 철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제 문제에 있어 비록 뚜렷한 차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지지 비율이 높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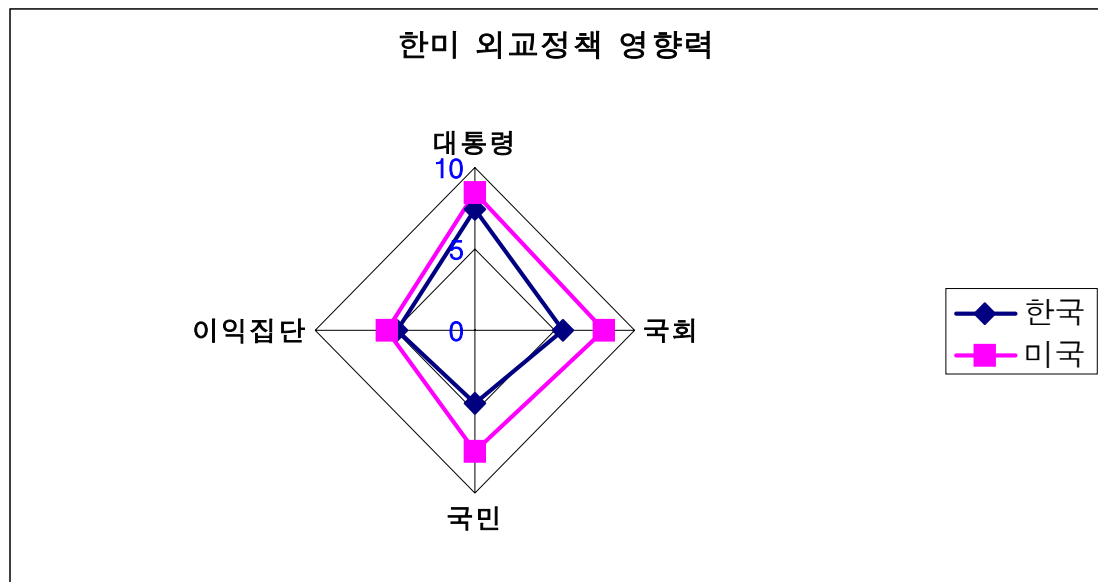
□ 양국 외교정책 결정시스템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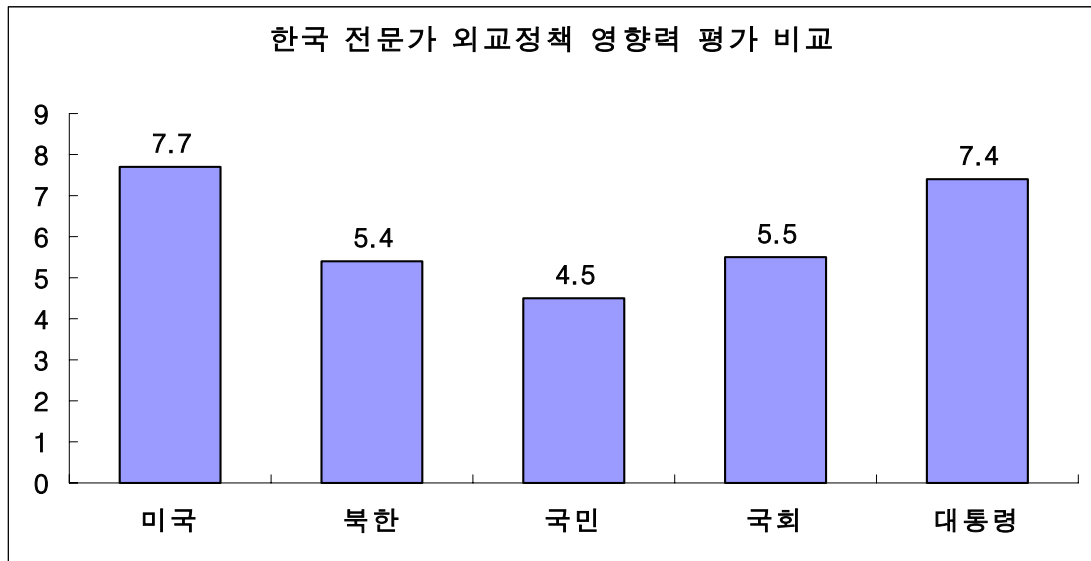
한국의 외교정책 결정에 대한 영향력, 미국정부> 한국의 대통령

미국은 대통령-의회-국민간 견제와 균형, 한국은 미국과 대통령에 영향력 집중

미국 전문가들은 제도적으로 최고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과 의회의 대외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10점 만점에 각각 8.5점과 8.1점을 부여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이 7.3점이고 이익집단은 4.7에 불과하다. 한국 전문가들은 대통령과 국회의 영향력을 각각 7.4점과 5.5점으로 평가했다. 국민은 4.5점이고 이익집단은 4.0점이다. 순위에는 유사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과 국회의 차이가 크다는 차이는 발견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욱 커다란 두 나라 사이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은 7.7점의 미국 정부다. 이 밖에 북한 정부가 5.4점, 중국 정부가 5.3점 그리고 일본 정부가 4.8점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영향력이 한국 대통령보다 높다는 현실도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결과겠지만 다른 나라 정부의 영향력 모두가 한국 국민들의 영향력보다 크다는 평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국의 경우 주변 강국의 영향력에 부대길 수밖에 없는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과 외교정책 결정과정이 행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관련 그래프들





□ 대북 접근법에 일치

“한국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조치 반대” 한국 88%, 미국 73%

두 나라 전문가 모두 한반도에서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즉 한국 정부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떠한 무력 사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대체적인 합의가 발견되었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하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동의’에 한국 전문가가 88%, 미국 전문가의 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한국 80%, 미국 64%)나 미국 동맹국의 동의(한국 59%, 미국 70%)보다 높은 수치다.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도 한국 전문가의 97%, 미국 전문가의 82%가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미국 전문가들 모두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양 집단 모두 미국의 적극 개입을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선제 공격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개입 자체는 반대하고 있다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 그래프들

